

민주 주도 '이재명 선거법 재판 면소' 법안 처리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 '행위' 삭제
정청래 "사법쿠데타로 국민적 공분"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헌법 위반"
국힘 "누 처벌면제법·부끄러운 입법"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처벌 면제법"이라며 반대 표결을 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안전 처리를 막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

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기소 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보고 강력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제 토론에서 "다른 사람들은 (선거법 조항을 적용 받아) 다 공직에서 사퇴하고 선거권이 상실됐다. 이는 이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과도하게 모든 것을 해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입법"이라고 했

다.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정색 조끼 차림으로 회의장에 참석해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길래 저도 비슷하게 해 봤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라며 "법원에서도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도 없고 이 후보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 등은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서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취지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 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상히 국민

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라고 했다. 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출석 사유서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내놓, 다섯 줄짜리를 복사해 붙인 듯이 사유서를 냈다. 이리니 사법개혁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미뤄 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 (헌법) 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李 유세장에 테러 대비 풍선·방탄유리 설치 검토

"저격용 소총 밀반입 제보 접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앞서 지난 10일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테러 대응 TF와 테러 제보센터, 후보 안전실장을 두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철저히 대응해서 모든 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후보 테러 위협 제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보 내용까지 알지 못하지만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과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정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는 이 후보가 하얀색 방탄복을 착용한 채 선거운동복을 갈아 입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위기 극복 총사령관, 경제 대통령, 국민통합을 약속했지만 제 부족함으로 인해 아쉽게도 졌다"며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내란으로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출정식에 기동대 6개 부대와 경찰특공대 등 390여명을 배치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의 유세현장에는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된 모습도 확인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자 저격 차단용 풍선을 유세장 곳곳에 띄워 시야를 차단하거나 4면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전남 국토·도시·지역개발 전문가 104명 "李 지지"

광주·전남 지역 국토·도시·지역개발 전문가 모임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토·도시·지역개발 분야 교수와 학회장, 연구원, 석·박사 104명은 14일 목포역 호남선 종착역 표지석 앞에서 성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힘써 줄 책임자"라며 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들은 "지금껏 정부는 신속 성장만을 지향하며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 등에 국가 재정과 민간자본을 집중해 왔고, 이로 인해 광복 후 8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 간 불균형,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역량 급감 등 부작용도 극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기존 균형발전책을 뛰어 넘어 분산과 균형을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혁신적,

창조적 전략이 시급하다"면서 "이 후보는 이미 수차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부채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에게 호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호남 내륙 고속철도 신설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의 연계 △호남권역 내 기반시설 사업 신속 추진 △호남지역 내 미래산업 집중 투자 △남부권 신해양관광환경수도 조성 등 5가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모임 대표인 이봉수 박사(대혁신호남포럼 이사)는 "차기 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등이 뒤쳐져 있는 호남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李 후보 부인 김혜경, 5·18 유족과 비공개 면담

오월어머니집 방문 "母 마음 느껴" 빛고을타운 배식 봉사 등 선거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14일 광주를 찾아 5·18 유족과 오월어머니집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면담 자리에서 "5·18 전 유족들을 미리 찾아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젊었을 때는 확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위로하자, 김 여사는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제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김 여사가 12·3 계엄 이후 5·18 어머니들이 걱정됐다면 당시 심정을 물었다"며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을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광주 빛고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왼쪽) 여사가 14일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에서 안성례 오월어머니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지역 유권자들과 만났다. 특히 해당 장소는 지난 19대 대선이 치러진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연일 찾았던 곳이다.

오월어머니집 방문 이후 김 여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증인' 고(故) 조비오 신

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를 고발한 조영대(조비오 신부의 조카) 신부를 만났고, 16일에 다시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17~18일 광주 유세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증원법안' 법사위 상정

내란사건 판사 항응 의혹 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

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충 주점에서 여러 차례 항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톱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